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 인원 더 늘려야”

■제주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승아·양영식 “85-90% 접종해야 안정적 집단면역” 홍명환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대구시에 뺏길 상황”

안정적인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 제주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 인원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 회의에서 나왔다. 또 제주도가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경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도의원들은 도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제주도는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제주지역 접종 대상은 도내 인구 69만 7578명 중 18세 이상인 57만 5116명이다. 제주도는 집단 면역 형성을 고려해 이중 70%인 40만 2580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도의원들은 백신 효과를 감안하면 제주도의 목표치가 낮

게 설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백신을 접종하면 (모든 면적이 형성되는 등) 100%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다”면서 “백신별 예방 효과는 65-90%이기 때문에 (전체 접종 인원의 70%가 면역을 형성하는) 집단 면역 체계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목표치는 접종 인원 70%가 아니라 85%까지 늘려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도 “백신 접종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백신 맞는 것을 거부하는 도민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제주도의 접종 목표 인원은 85-90%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16년 발표된 정부 방역 보고서대로라면 전국 네 번째



24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경쟁은 제주와 인천 등 2파전으로 치러져야 한다. 그러나 본보 보도(2월17일자 1면)로 질병관리청이 올해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 후보 지역에 제주와 인천을 포함해 강원과 경기도를 아우르는 수도권, 경북과 대구를 아우르는 대구·경북 권역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는 사실이 드러나며 제주 유치가 더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

동 갑)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역으로 인천과 대구가 유력하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며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가 대구표를 의식해 대구에 (전문병원을) 양보하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정부에 제주 유치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도로관리 주체 따라 유지비 최대 10배” 송창권 “동지역 옛 국도 행정시 떠맡아 예산난”

환경도시위 행정시 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도로의 유지 보수 비용이 행정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유지 보수 비용보다 최대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의도·이호·도두동)은 도로 관리 주체별로 유지 보수 예산과 관리 인력이 양극화 한 문제를 짚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가 관리하는 도로는 옛 국도(현재는 지방도로 편입)를 비롯해 지방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로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시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포함해 제주도가 관리하는 4개 도로 유형 가운데 동 지역을 지나는 도로를 관리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관리하는 도로는 19개, 제주시는 3848개, 서귀포시는 495개다. 관리해야 할 도로가 양 행정시에 집중되다보니 유지 보수 비용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유지 관리비는 산술적으로 따졌을



송창권 의원.

때 제주자치도 관리 도로가 km당 3300만원인 반면 제주시는 190만원, 서귀포시는 120만원으로 추산됐다.

관리 인원도 제주시는 72명인데 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28명과 13명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양 행정시는 매년 도로 관리 인력·예산난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도심 동 지역을 지나는) 구국도 등을 제주도가 맡지 않고 행정시로 넘기다보니 (행정시는) 예산도 없이 관리에 허덕이지 않느냐”면서 “(도로 관리 주체를 손쉽게 위해) 조례 개정을 생각해 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관리하는 도로는 19개, 제주시는 3848개, 서귀포시는 495개다. 관리해야 할 도로가 양 행정시에 집중되다보니 유지 보수 비용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유지 관리비는 산술적으로 따졌을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평택물류센터 주먹구구 설계로 혈세 낭비”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이동노동자 위한 ‘혼디킴팡’ 확대 운영을” 한목소리



고태순 의원.



임정은 의원.



강성균 의원.

류센터 설립해 해상운송비 등 물류비 절감효과를 기대했으나 결국 매각처분돼 도민 혈세만 낭비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를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해 도민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24일 제392회 임시회 2차회의를 열고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테크노파크 등으로 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의원(아라동)은 이날 “평택항에 제주 농수축산물 수도권 거점기지로 제주종합물

이러 “물류센터 조성기간에 제주와 평택항로 운항이 중단돼 접근성에 문제가 발생해 센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것도 문제이지만 건축설계상 센터의 내부는 일반화물 구조도 아니고 냉장·냉동화물을 위한 구조도 아닌 기형적 구조로 설계됐다”면서 “운영사업자 대부분이 보세창고로 사용하다보니 당초 센터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도내 이동노

동자 24시간 쉼터인 ‘혼디킴팡’에 대한 이용 횟수와 등록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제주시에 1개소만 설치돼 있다”면서 9개 직종 이동노동자의 쉼터인 ‘혼디킴팡’을 확대해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고태순 의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코로나19 백신 보급, 정부와 제주자치도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향후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 된다”며 “서귀포시를 포함한 제주도내에 ‘혼디킴팡’ 확대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의원(예월읍)은 제주형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어려운 지역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탐나는 전’ 가맹점 등록률이 61%에 그치고 있고, 판매액 또한 230억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가맹점 모집 목표달성을 위해 행정력과 소상공인 대상 홍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마 무상 교배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도내 제주마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제주마 무상 교배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무상 교배서비스는 천연기념물 제347호인 제주마의 근친도 증가에 따른 유전적 저해요인을 미연에 방지해 체계적으로 혈통을 관리하고 이에 따른 제주마의 경주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축산진흥원은 능력이 우수한 씨수말 14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9마리는 농가 교배서비스 용도로 활용되며, 4마리는 자체 교배용으로 이용된다.

교배서비스센터 운영 기간은 2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등록된 제주마를 사육하는 농가 누구나 가능하며, 농가에서는 제주마의 발정상태를 관찰해 교배 적기를 판단한 후 교배서비스 희망일 기준 1일 전 축산진흥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내달부터 전기이륜차 1200대 민간 보급 40-50% 자부담 조건... 도, 연말까지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온실가스 저감과 청정제주 구현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 사업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의 2021년 전기이륜차 보급 계획에 따라 전기이륜차 1200대 범위 내에서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 이륜차 보조금은 최대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 보조금 신청자는 보조금의 40-50%를 자부담해야 한다. 또한 본인 소유의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해 구매할 경우에는 유형·규모별 최대 지원액 한도 내에서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신청은 제작·수입사 및 도내 영업점에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연말까지이나 예산 및 물량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기이륜차 보급물량의 10%는 취

약계층 및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영업용 내연기관 폐차 후 전기이륜차 구매자에게 우선 보급된다.

전기이륜차 보급이 일부 사업자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은 1대, 기업·법인인은 최대 20대를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해 주요 부품에 대한 무상 애프터서비스(A/S) 기간 설정 및 A/S 확약 보증증서 또는 보증증권 제출 의무화가 도입됐으며, 미제출될 경우 해당 이륜차 보조금 신청·접수가 제한될 수 있다.

2021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오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안내된다.

각종 문의사항은 전기이륜차 제작사별 영업점, 전기차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70) 및 저탄소정책과(710-2614)로 연락하면 된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도민 바보 만드는 “재밋섬” 부동산매입 중단하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18년부터 원도심 재밋섬 건물을 매입을 전제로 추진해온 “제주아트 플랫폼”사업 재밋섬 부동산 매입은 제주도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다. 수많은 의혹과 문제가 있는 재밋섬 부동산을 “사업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 조건부 추진한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제주사회가 비상식과 패거리 정치권달들이 지배하며 제주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제주경찰청은 이미 2018년 8월 22일, 2019년 10월 24일, 2019년 11월27일 3차례 걸쳐 “타당성 없는 재밋섬 부동산 매입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 한 바 있다.

제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8일 타당성검토위원회에서 “제주아트 플랫폼” 조건부 추진한다는 발표를 했다.

2019년 1월 1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서도 매매계약 체결서의 불합리한 약정내용, 감정평가금액의 시장가치 미반영 등의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제주도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감사위원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이러한 감사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원도심 상권이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원도심 인구 급격한 감소와 주차시설 등이 확충 되지 않아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하려는 재밋섬 건물은 상업시설로서의 건물 가치를 상실했다. 그래서 재밋섬 건물주는 13억 원을 들여서 건물철거한 후 지하4층 지상12층 주상복합건축을 하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재밋섬 건물은 140억원에 감정가가 나와서 유찰을 거듭해서 2011년 9월 경매최저가격이 24억원까지 떨어진 바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지금 매입하려는 가격에 50%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최근 주변 토지 매매 사례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건물을 철거해야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재밋섬 건물의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엄밀하게 시장가치를 반영 하지 않아서, 정책결정권자들의 정치자금 등 검은 뒷거래가 의심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했는지 의문이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행정이 눈에 보이는 부패비리를 좌시할 수 없다. 경제정의라는 관점에서 다음 6가지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1. 상업적인 건물가치를 상실하여 철거 후 주상복합건축을 하겠다는 재밋섬 건물은 100억원에 매입하고, 70억원 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속이는 행위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 10억원 이하에 대해 전결권을 가진 국장이 100억원이상을 결재했다는 것도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계약금 2원에 손해배상 위약금 20억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검찰은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제수사하길 촉구한다. 이미 지불한 계약금10억원은 관련자가 책임지고 변상하여야한다. 이런 사안을 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 가볍게 인식한다는 것은 목과할 수 없다.
3.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원들은 왜 행동하지 않는가. 이런 터무니없는 계약에 의해 제주도민 혈세가 도둑맞고 있는데도 침묵하며 방관할 것인가. 부패한 권력자에 로비당해서 직분을 망각하며 제주도민을 배신하는 것은 아닌가.
4. 2021년 2월8일 “사업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 도출한 조건부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어서 수용할 수 없다. “조성사업타당성검토위원회”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했는지 의문이 든다. 검토위원 1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내용을 투명하게 발표하라.
5. 제주도 언론과 주민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밋섬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로비에 이용당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6. 코로나 사태로 지역경제가 매우 힘든 시기이다. 이러한 때 원희룡지사는 특혜비리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재밋섬 부동산매입을 약 100억원의 예산으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제주도민을 기만하며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되는 것임을 경고한다.

2021년 2월 9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